

제369회 국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제 3 호

국회 사무처

2019년 7월 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상정된 안건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이인영·나경원·오신환 의원 외 261인 제출) 1
2.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1

(10시02분 개의)

○의장 문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이인영·나경원·오신환 의원 외 261인 제출)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원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욱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19년 7월 3일, 7월 4일, 7월 5일까지 3일 동안 오전 10시부터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 및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10시04분)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2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84일간의 공전을 끝내고 마침내 오늘 국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고,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과 추경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돌아보면 20대 국회 내내 파행이 끊이지 않았

습니다. 무려 17차례나 반복했고 그때마다 국회는 번번이 멈춰 서야 했습니다. 민생과 개혁은 벽에 막혀 해법을 찾기 어려웠고 시급한 현안들은 국회만 오면 출구를 못 찾고 배회해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책임을 거론하거나 힐난하기 위해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회의장 밖을 서성거릴 때 우리보다 훨씬 더 가슴 졸이며 국회 정상화를 기다려 온 국민을 절대 잊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게다가 이제 20대 국회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밤낮을 쫓개 가며 민생에 몰두해도 부족합니다. 다시는 국회의 시간이 멈추지 않도록 서로 인내하며 공존과 협치의 지혜를 모아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회는 우리 사회 갈등의 조정자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은 이념과 빈부, 계층과 지역을 넘어 세대와 젠더 등 다양한 집단과 이해관계로 첨예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국민의 80.8%는 사회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합니다. 광화문 광장의 이념 갈등, 첨예한 노사 갈등과 비정규직 문제, 해마다 되풀이되는 임대차 갈등, 온·오프라인을 들쭉이는 젠더 갈등까지 모든 삶의 현장에 상생의 해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의회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은 사회 갈등의 조정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정치라는 공론의 장으로 가져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이끌어내는 것이 의회주의의 출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2019년 상반기, 우리 국회는 국민들께 이런 의회민주주의를 보여 드리지 못했습니다.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만들자던 선진화법은 난폭하게 무력화되었고 민의의 전당은 갈등과 과열음만 증폭되었습니다.

저와 민주당은 솔직히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주장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사회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회는 타협과 상생의 물꼬를 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의 빈 공간을 열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어준 빈 공간의 어느 지점에서 상생의 해법, 공존의 철학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달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공존의 정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밀어내기만 하는 정치에서 우리 모두 함께 벗

어나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충정이었습니다.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 세 가지 공존의 길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공존의 정치는 단지 화평하게 잘 지내 보자는 차원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첫째,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는 길입니다.

둘째, 남과 북이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도약하는 공존의 길입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따뜻한 공존, 참 공존의 길입니다.

지난 주말을 뜨겁게 달구었던 한반도 평화의 기운은, 어렵고 힘든 이의 손을 잡는 따뜻한 세상의 희망은, 대결과 극단의 선택을 넘어서는 공존의 합리성은 분명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할 미래의 길입니다.

2016년 겨울, 촛불집회는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감했습니다. 국민은 끝까지 평화로 인내하며 마침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폭력도 없었으며 어떠한 배제도 없었습니다.

저는 역설적이지만 그 현장에서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는 새로운 정치를 상상했습니다. 진보가 유연해지고 보수가 합리적이 된다면 우리는 다 함께 더 큰 공존의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극좌의 경직과 극우의 광기에서 우리 모두 벗어날 때 우리 사회는 새로운 공존의 질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막말과 혐오, 극단과 결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말과 혐오, 극단은 공존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공공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론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합니다. 또 내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서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민생과 대안을 위한 정책 경쟁, 책임과 품격 있는 정책 경쟁, 상대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정책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보는 끈대, 보수는 꼴통이라는 낡은 이미지에서 함께 벗어나 누가 먼저 혁신하나 멋진 경쟁을 펼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께서 민생 투어 이후에 제안한 정책 경쟁에 기꺼이 응대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 개선은 중대한 정치 개혁의 길입니다. 정치 구조에서 선거제도에서 공존의 길은 비

례대표제의 개혁에서 출발합니다.

개헌 논의 당시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을 높이기로 했던 여야를 넘는 합의 정신을 저는 기억합니다. 국회 속기록에도 아마 남아 있을 것입니다. 헌법에 명문화할 것인지 선거법에 구체화할 것인지 단지 그 차이만 있었다고 저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례대표제도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긋났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합니다.

남은 두 달의 정개특위 연장 기간 동안 국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에 자유한국당이 적극 동참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에 기초하여 우리 스스로가 강제한 합의와 타협의 장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의 중요한 또 하나의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공존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야합의 비난을 넘어 국민의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 정상화의 과정에서 소통과 교감의 부족이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협상을 담당했던 저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선거제도의 개혁 과정에서 더 큰 공존과 협치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소통하고 공조하며 더 굳건한 협치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특위 연장으로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상황을 우리 모두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목표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과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속에서 더 큰 정당성을 마련하여 선거제도의 개혁과 비례대표제도의 진화를 위해 변함없이 전력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마침내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휴전 협정을 맺었던 바로 그 판

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 적대 관계를 끝내겠다는 굳은 의지의 상징이었고 종전 선언으로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에서 평화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확고하게 다가왔습니다.

공존의 길을 향한 두 번째 논의는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도약하는 공존의 길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의 선수단이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내년 동경 올림픽에 남북이 단일선수단을 구성해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의지를 전 세계에 드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노이 이후 중단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동시적·단계적 접근에 따라 진척되면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평화는 더 이상 이념도, 당위도 아닙니다. 꿈도 아니며 이미 다가온 현실일 뿐입니다. 평화를 수용하면 미래의 길이 보일 것이고 평화를 부정하면 낡은 과거에 우리 모두는 머물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념의 진영이 다르다 해도 우리나라와 겨레의 비전을 견어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부의 패싱도 없었고 정상 간의 왕따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세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한반도 운전자론은 동북아 평화의 설계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수용하는 대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평화로 가는, 통일로 가는 공존의 열차에는 모두가 함께 탑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결단하면 여야의 모든 정당대표들이 함께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 국회회담을 조기에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야당의 지도자도 따로 평양을 방문하여 북의 고위급 인사들과 민족의 대사를 의논할 수 있도록 저부터 적극 돕겠습니다.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공존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확고한 길을 우리 국회가 국민과 겨레 앞에서 함께 만들 수 있기를 진실로 희망합니다.

평화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상상의 무대, 삶의 무대를 물려줍니다. 빠른 통일의 길은 멀어졌어도 평화를 통한 빠른 도약의 길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비운의 조선을 넘어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나 우리의 후손들은 해방 100주년을 맞기 전에 그랜드 코리아, 한반도 대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합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포용과 공존의 길로 함께 가야 합니다.

노동, 장애, 여성, 노인, 청년, 우리에게 익숙한 사회적 약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는 노동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강자가 되어 있다는 아이러니도 발견합니다. 그것은 임금에서 우월한 대접을 받는 노동자의 존재 때문이기도 하지만 언론과 정치권의 편견이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개헌특위 논의를 하던 중 저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 서 있는, 헌법에 사회적 약자로 규정되어 있는 노동자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본인들은 ‘노동자’라는 이름을 원하는데 보수는 여전히 ‘근로자’라는 이름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더 큰 이름은 노동조합입니다. 그 더 큰 이름인 노동조합은 여전히 사회적 시민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한 채 사회적 배제와 편견의 주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운영위원장 예정자로서 탄원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노총의 위원장 구속을 통한 수사가 정말 능사였는지 저는 반문합니다.

공안과 편견의 시각을 거두면 우리에게서 새로운 포용과 공존의 길이 보입니다.

거기서부터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우리 모두 함께 보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성숙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수많은 어느 독거노인의 죽음, 세월호의 아이들, 윤창호와 그의 친구들, 노회찬과 새벽 버스의 사람들, 거둬지는 집배원들의 과로사, 성수역 스크린도어 사건, 불을 향해 뛰어든 어느 소방관들의 죽음 그리고 김용균의 이름으로 찾아온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산재예방 의무와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켰고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 정규직 고용법을 발의하는 등 노동자의 삶에 안전망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8년을 뜨겁게 달궜던 미투 운동은 성폭력·성범죄 대응 법안 통과로 이어졌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 장애등급제 폐지 등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용하는 정책을 보다 확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무엇보다 국회는 청년의 꿈을 지켜야 합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므로 청년의 삶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전체 실업률은 4%였지만 청년실업률은 무려 9.9%에 달했습니다. 취업 지연과 신용불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 현실을 개탄하는 ‘청년실신시대’라는 비난도 나옵니다.

우선 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를 도입해서 청년이 미래를 꿈꾸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유럽연합은 2014년부터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고용을 제공하는 청년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을 배울 기회와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우리도 실정에 맞게 청년들에게 안정적 주거와 양질의 직업교육, 일자리 제공을 통한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청년정책의 기본틀을 세우는 청년기본법의 제정입니다. 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모든 의원님들의 축복 속에서 꼭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국회 안에 청년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미래청년기획단의 구성도 제안합니다. 청년에게 절실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교육의 기회, 공정한 경쟁의 원칙에 관한 룰을 청년들이 직접 설계하고 결정하면 우리 국회는 입법으로 뒷받침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민주당은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의 참정권을 18세로 낮추겠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의 동일 적용 추진을 비롯해 피선거권 연령의 제한도 개혁하겠습니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힘을 모아 어려운 경제 현실을 타개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날 우리는 대기업의 수출에만 의존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채택해 왔습니다. 이런 전략이 추격형 압축성장 시기에는 유효하게 작동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교역 성장이 뚜렷하게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세계무역의 뉴 노멀 현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경제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분쟁은 경상수지 불균형에서 촉발된 관세전쟁을 넘어서 환율과 기술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올해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 전망을 당초 3.7%에서 2.6%로 대폭 낮췄습니다. IMF와 OECD도 3.9%까지 바라보던 금년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을 국제경제환경 악화를 반영해서 각각 3.3%와 3.2%까지 낮췄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수출에 편중된 경제구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 기업과 가계의 균형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중 두 나라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40%를 상회하는 우리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식민지 역사와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10위권의 빛나는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인권 후진국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로 발전시킨 것도 우리 국민의 저력입니다.

올 초 IMF도 우리 경제에 대해 숙련된 노동력, 단단한 제조업의 토대, 낮은 정부 부채, 풍부한 외환보유고 등 탄탄한 기반 위에서 신중하게 경제 관리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업인과 노동자, 소상공인 등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가 방법과 수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 경제의 회생을 바라는 그 목표는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야당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하여 실정과 파국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하며, 정부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 활력에 총력을 다합시다.

정부는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기업 활력 제고와 경제의 체질 개선 및 포용성을 확대하는 3대 방향으로 그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 외에도 기업의 설비투자가 되살릴 수 있는 세제 지원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도시재생과 국민안전 SOC 사업도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이 정비되고 노후화된 상하수도과 도로의 정비를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당은 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정책을 집행하는지 항시 꼼꼼하게 점검할 뿐만 아니라 재정, 금융, 규제 등 경제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 경제의 활기를 높일 수 있는 공정과 상생으로 가는 보다 넓고 깊은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4개월 연속 당초 목표인 15만 명을 상회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동반 상승하며 작년의 취약한 흐름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대, 40대 및 제조업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미중 무역 마찰에 따른 세계 경제의 악화 정도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일자리는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처지입니다.

고령화 추세와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분들의 숙련과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합니다.

이분들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공공일자리 확충도 불가피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공공일자리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합니다. 우리 정부가 늘리려는 공공일자리 10만 명은 소방관, 집배원, 요양보호사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자리입니다.

하지만 역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입니다. 기술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밀양과 구미에서도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상생형 일자리 지원법과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일명 유턴기업 지원법 등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의와 또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노동자가 흘린 땀은 과거 우리 경제의 초석이

있고 이분들이 체현한 숙련과 성실함은 미래 경제의 자산입니다. 경제적 변화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금 재기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 전직알선 등의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합니다.

기업 역시 그 부담을 함께 나눠 져야 합니다.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함께한다면 노동계도 구조 개선의 더 큰 틀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최저임금, 상생 협력의 메커니즘을 우리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1988년 첫 도입된 이후 지난 30년간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한 순기능을 인정했기에 지난 대선에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다 같이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매년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임금 격차가 사회적으로 축소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규모와 경쟁력 격차가 너무 큰 우리 경제의 현실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그 자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에게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기업과 원청, 본사가 그 부담을 나누어 지는 상생의 메커니즘을 갖추는 데로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한 반면 세계 경제의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보완할 근로장려세제 예산도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활 안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지혜롭게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이제 자영업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영업은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허리 역할을 충실히 해 준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사업 규모는 영세합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와 온라인 거래

의 급증으로 경영환경도 매우 나빠졌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늘지 않도록 정책적 관리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영업자의 생존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병행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자구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과감한 선제적 금융 지원과 공공컨설팅을 정부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국에는 650만 명의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40~60%에 달하는 국민이 자영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자영업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취업 실패나 조기 퇴사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진출하는 분들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기술과 경험 없는 생계형 자영업의 지속 가능성은 그래서 매우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과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무엇보다 우리 국회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제안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에 22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투자에 우리 모두가 인식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기회와 재기의 발판을 우리 국회와 정부는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연간 8000억 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대폭 덜어 드렸습니다. 제로페이 도입으로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더욱 낮춰 갈 예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도 4% 낮추었고 계약 갱신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법률서비스 강화 등을 포함해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생태계를 공존과 상생의 질서로 바뀌내기 위한 보다 과감하고 다양한 정책을 함께 개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데이터가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1980년대에 우리는 ‘반도체가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선언하며 반도체 산업을 일으켜 왔습니다.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쌀입니다. 그 후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산업의 새로운 쌀은 데이터입니다.

저는 원내대표가 된 후 많은 경제전문가와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핵심자원이 인력밖에 없는 우리 경제의 활로는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는 것에 달려 있고 데이터 경제가 전통적 제조업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열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데이터 경제의 어두운 면에 대해 지적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초대형 데이터 기업들이 고객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우려도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에 개인정보 보호체계(GDPR)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EU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역외 이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캐나다, 일본은 발 빠르게 적정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뼈아프게도 우리나라는 EU로부터 불인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회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아직 처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국가 기업들은 유럽에서 데이터 활용을 통해 경쟁의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발이 묶여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책임 있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들과 기업에 면목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복귀하신 만큼 하루 속히 심의에 협조해 주시고 함께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상시국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이 시급합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월과 4월, 6월과 8월에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얼마나 허망하게 지켜지지 않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1년 365일 일하는 상시국회 체제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합니다.

매월 1일에 자동적으로 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국회 운영 일정 작성기준을 변경해서 의사일정을 논의하다가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

합시다.

저는 국회운영위원장으로 국회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나경원·오신환 원내대표님께도 우리들의 임기 동안 국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여야가 싸워도 국회를 멈추지 않고 민생입법에 남은 기간 오직 힘쓰겠다는 국민을 향한 우리들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둘째,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주도록 합니다.

프랑스 등에서는 세 번 이상 상임위에 결석하면 위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벨기에에서는 상습적으로 불출석하면 월급이 40%가 삭감됩니다. 호주와 프랑스 등에서는 일정 횟수 이상 본회의에 불출석하면 제명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은 여론조사에서 77.5%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국민의 80.8%가 여론조사에서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통감하고 법안을 이미 제출해 놓았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일하는 국회의 제1 과제는 추경 처리입니다.

4월 25일 추경안이 접수된 이후 오늘까지 무려 7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록입니다. IMF가 지난 4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던 바로 그 추경입니다.

추경을 통해 경제 활력의 마중물을 기대하는 기업인과 미세먼지 그리고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에서 재해복구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 모두의 마음이 타들어 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더 지체할수록 추경의 효과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국민의 간절한 기다림이 속절없이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추경 편성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책정된 추경인 만큼 신속한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당의 의견이 있다면 또 이견이 있다면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고 반영할 수 있으면 될 일입니다.

이미 추경은 불모로 잡힐 만큼 충분히 다 잡힌 지 오래되었습니다. 추경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은 지난 2년간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개혁을 함께 발맞추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직 체감하시는 성과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다. 앞으로 집권 여당의 위상을 재정립해서 확실하게 국정을 주도하고 민생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때로는 정부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집권 여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정부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부가 여당보다 야당과 먼저 협의해도 좋습니다. 대신 야당도 여당과 다름없다는 생각으로 국정에 책임 있게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의 입법성적은 정말 참담합니다. 법안 처리율은 고작 29.3%에 불과하고 지금도 1만 4731건의 법안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40%를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부끄러운 성적으로 20대 국회를 마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국회에 잠든 1만 4000건의 법안들을 깨워 냅시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많은 고뇌와 연구 끝에 발의된 법안들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생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신속한 법안 처리의 과정으로 나섭시다.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부터 신속하게 논의를 진척시키고 심의하고 결정해 나갑니다.

국민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 헌법 가치가 살아있는 민생국회, 여러분 모두와 함께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길에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은 공존의 정치로 국회의 협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생을 더 힘있게 보듬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희망을 복원하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행동과 실천의 모습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수)

○의장 문희상 이인영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 의원(265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은희	권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협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성환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호
김정훈	김종민	김종석	김종회
김중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박경미	박광온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승주
백혜련	서삼석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엄용수
여상규	여영국	염동열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일규	윤재욱

윤종필	윤준호	윤한홍	윤호중	박완주	박용진	박정	박주민
윤후덕	이개호	이규희	이동섭	박주선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백승주	서삼석	서영교	서청원
이상현	이석현	이수혁	이언주	서형수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송갑석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종구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창현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심기준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희	안상수	안호영	엄용수	여상규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여영국	염동열	오신환	오영훈
이현승	이현재	이혜훈	이후삼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재훈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민봉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유성엽	유승민	유은혜	유재중
장계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윤관석	윤상직	윤소하	윤영석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윤영일	윤일규	윤재옥	윤종필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윤준호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정인화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이개호	이규희	이동섭	이만희
정태욱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이상돈	이상민	이상현	이수혁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이인영	이장우	이정미	이종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평)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진복
최교일	최도자	최연혜	최운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희	이춘석
최인호	최재성	추경호	추미애	이학영	이해찬	이현재	이혜훈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정애	이후삼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의락	장석춘	장정숙	장계원	전재수
홍익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황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개의 시 재석 의원(209인)

강병원	강석호	강창일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성동
권은희	권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협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두관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순례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종민	김종석	김종희	김종훈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미	나경원
남인순	도종환	맹성규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박경미
박광온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범계	박병석	박영선	박완수

○산회 시 재석 의원(230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효상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은희	권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협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 선 동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원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수 민 김 승 회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원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 중 민 김 중 석 김 중 회
 김 중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한 정
 김 해 영 김 현 미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도 종 환 맹 성 규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옥 민 병 두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범 계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인 숙 박 정 박 주 민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혜 련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갑 석 송 기 현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회 경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 용 현 신 창 현 심 기 준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엄 용 수
 여 영 국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위 성 곤 유 기 준 유 동 수 유 민 봉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석 윤 일 규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한 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규 희
 이 동 섭 이 만 희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상 현 이 석 현 이 수 혁 이 용 주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인 영 이 재 정
 이 정 미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종 명
 이 종 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현 승 이 현 재 이 혜 훈
 이 후 삼 이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재 훈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회
 전 혜 숙 정 양 석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인 화 정 중 섭 정 진 석
 정 춘 숙 정 태 옥 제 윤 경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 도 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경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회

○출장 의원(3인)

김 영 춘 성 일 중 지 상 욱

○청가 의원(21인)

강 훈 식 김 경 진 김 관 영 金 成 泰
 민 흥 철 박 순 자 박 재 호 변 재 일
 심 상 정 심 재 권 어 기 구 이 정 현
 이 대 규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재 호 정 점 식 조 원 진 홍 영 표
 홍 일 표

○국회 참석자

입 법 차 장 한 공 식
 의 사 국 장 권 영 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이 낙 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이 흥 남 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부 유 은 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 유 영 민
 외 교 부 장 관 강 경 화
 통 일 부 장 관 김 연 철
 법 무 부 장 관 박 상 기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진 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 양 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개 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 윤 모
 보건복지부장관 박 능 후
 환 경 부 장 관 조 명 래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재 갑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진 선 미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김 현 미
 해 양 수 산 부 장 관 문 성 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 영 선

○출석 정부위원

국 방 부 차 관 박 재 민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 학 도

【보고사항】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김삼화	바른미래당	2019. 7. 1.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외교통일	이인영	박 정	더불어민주당	2019. 7. 3.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박 정	이인영		

○의안 제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조응천·김병기·서삼석·이규희·김성수·최인호·권철승·윤관석·윤준호·우원식 의원 발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조응천·김병기·서삼석·이규희·김성수·최인호·권철승·윤관석·윤준호·우원식 의원 발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6. 28. 정부 제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강석호·정갑윤·추경호·주호영·임이자·원유철·송언석·김정재·백승주·정병국 의원 발의)

이상 4건 7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서영교·신동근·소병훈·민홍철·신창현·김현권·한정애·김영진·맹성규·서형수 의원 발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9. 6. 28. 정부 제출)

이상 3건 7월 1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유승희·김경협·김정호·서영교·송옥주·유성엽·윤후덕·이석현·이종걸·한정애 의원 발의)

7월 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변재일·노웅래·전혜숙·윤호중·신창현·홍익표·김종희·고용진·송옥주·이석현 의원 발의)

7월 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이석현·김병기·정세균·이재정·심재권·전혜숙·조승래·신창현·송갑석·송기현·유승희·신동근·윤일규·원혜영 의원 발의)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이석현·김병기·정세균·이재정·심재권·전혜숙·조승래·신창현·송갑석·송기현·유승희·신동근·윤일규·원혜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1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 6. 28. 정부 제출)

7월 1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김영호·김현권·송옥주·김태년·김종민·송갑석·신창현·기동민·인재근·이찬열 의원 발의)

공공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이규희·안호영·윤일규·송갑석·김상희·신창현·강훈식·윤후덕·김영춘·정춘숙 의원 발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이석현·김병기·정세균·이재정·심재권·최재성·조승래·신창현·송갑석·송기현·유승희·신동근·윤일규·원혜영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함진규·송석준·박덕흠·김종석·신보라·정유섭·김성원·주광덕·성일중·송희경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박완수·강길부·주호영·추경호·윤영석·김도읍·김성원·김영우·조훈현·김성찬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상 4건 2019. 6. 28. 정부 제출)

이상 9건 7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

(2019. 6. 28. 박인숙 · 이상현 · 이동섭 · 손혜원 ·
윤재옥 · 정진석 · 김승희 · 이종구 · 김현아 ·
김무성 의원 발의)

7월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2019. 6. 28. 조배숙 · 박주현 · 천정배 · 정동영 ·
유성엽 · 황주홍 · 정인화 · 이용호 · 장병완 ·
박지원 의원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이만희 · 경대수 · 이명수 · 김현아 ·
주광덕 · 김태흠 · 박완수 · 김성원 · 김규환 ·
정양석 · 김성찬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위성곤 · 서삼석 · 김현권 · 김철민 ·
백혜련 · 어기구 · 홍문표 · 황주홍 · 이찬열 ·
홍의락 의원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어기구 · 이규희 · 위성곤 · 신창현 ·
윤일규 · 서삼석 · 신동근 · 박재호 · 김철민 ·
심재권 · 김병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 회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어기구 · 이규희 · 위성곤 · 신창현 ·
윤일규 · 서삼석 · 신동근 · 박재호 · 김철민 ·
심재권 · 김병기 의원 발의)

7월 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염동열 · 송희경 · 여상규 · 손금주 ·
성일중 · 박덕흠 · 정운천 · 김정재 · 민경욱 ·

최연혜 · 이종명 · 장석춘 의원 발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박완수 · 주호영 · 김성원 · 추경호 ·
김승희 · 김성찬 · 윤영석 · 김영우 · 조훈현 ·
이찬열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정동영 · 박선숙 · 주승용 · 장정숙 ·
김광수 · 황주홍 · 유성엽 · 표창원 · 금태섭 ·
조배숙 · 정인화 · 채이배 · 최도자 의원 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
발의)**

(2019. 6. 28. 박완수 · 추경호 · 엄용수 · 김영우 ·
김승희 · 김성찬 · 조훈현 · 김도읍 · 주호영 ·
윤영석 · 김재경 의원 발의)

이상 4건 7월 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
발의)**

(2019. 6. 28. 윤재옥 · 이현재 · 엄용수 · 윤영석 ·
김성원 · 홍철호 · 박덕흠 · 민경욱 · 송희경 ·
문진국 · 조훈현 · 최연혜 의원 발의)

7월 1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박범계 · 송갑석 · 김정호 · 심기준 ·
전재수 · 이후삼 · 김두관 · 윤후덕 · 박병석 ·
황희 · 심재권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9. 7. 1. 채이배 · 이동섭 · 강창일 · 김삼화 ·
김종민 · 정인화 · 유동수 · 박선숙 · 이찬열 ·
이철희 의원 발의)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2019. 7. 1. 윤일규 · 유동수 · 신창현 · 이종걸 ·
이후삼 · 신동근 · 박홍근 · 전해숙 · 김태년 ·
우원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
발의)**

(2019. 7. 1. 김상훈 · 김기선 · 이현재 · 이종배 ·
송석준 · 김승희 · 윤영석 · 유승민 · 홍문표 ·
강효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

발의)

(2019. 7. 1. 유성엽·장정숙·김종희·박지원·김경진·김광수·정인화·정동영·이종걸·전재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2019. 7. 1. 김한표·송석준·임이자·정갑윤·송희경·박인숙·송언석·김규환·장석춘·성일종 의원 발의)

7월 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9. 7. 1. 기동민·정춘숙·정세균·신창현·김상희·윤일규·송갑석·박홍근·이학영·인재근·한정애·민홍철·우상호 의원 발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9. 7. 1. 기동민·정춘숙·정세균·신창현·김상희·윤일규·송갑석·박홍근·이학영·인재근·한정애·민홍철·우상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9. 7. 1. 강창일·유승희·송갑석·소병훈·홍익표·원혜영·인재근·송영길·정동영·이종걸 의원 발의)

7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2019. 7. 1. 이상헌·서형수·박재호·신동근·김영춘·정세균·정춘숙·김병기·송옥주·최인호·윤관석·안민석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2019. 7. 1. 이상헌·서형수·박재호·신동근·김영춘·정세균·정춘숙·김병기·송옥주·최인호·윤관석·안민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19. 7. 1. 김정호·안호영·백재현·서형수·이용득·이찬열·전재수·유승희·민홍철·서삼석 의원 발의)

7월 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9. 7. 1. 기동민·정춘숙·정세균·신창현·김상희·윤일규·송갑석·박홍근·이학영·인재근·유동수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9. 7. 1. 기동민·정춘숙·정세균·신창현·김상희·윤일규·송갑석·박홍근·이학영·인재근·한정애·민홍철·우상호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9. 7. 1. 기동민·정춘숙·정세균·신창현·김상희·윤일규·송갑석·박홍근·이학영·인재근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9. 7. 1. 임이자·염동열·정갑윤·김승희·김성원·문진국·장석춘·홍문중·김학용·정태욱 의원 발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9. 7. 1. 임이자·정갑윤·김승희·김성원·문진국·장석춘·홍문중·김학용·이명수·정태욱 의원 발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9. 7. 1. 임이자·염동열·정갑윤·김승희·김성원·문진국·장석춘·김학용·김성찬·원유철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

(2019. 7. 1. 이현승·윤종필·김한표·전희경·신보라·정갑윤·함진규·주호영·이종구·주광덕·정태욱·문진국·민경욱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19. 7. 1. 맹성규·강훈식·권미혁·기동민·박찬대·박홍근·서영교·서형수·이용득·이정미·전해철·한정애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9. 7. 1. 김철민·송기현·윤관석·신창현·위성곤·김정우·전재수·서삼석·윤영일·

이찬열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조승래 · 이석현 · 이동섭 · 조정식 · 박경미 · 도종환 · 김태년 · 김해영 · 정세균 · 이후삼 의원 발의)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 발의)

(2019. 7. 2. 정우택 · 조경태 · 이종명 · 金成泰 · 김석기 · 원유철 · 이진복 · 이종배 · 김규환 · 박인숙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정우택 · 원유철 · 이종배 · 박맹우 · 윤영석 · 이철규 · 문진국 · 이진복 · 김한표 · 박인숙 · 윤종필 의원 발의)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판문점 회동 및 회담 환영과 북미대화의 실질적 진전 촉구 결의안

(2019. 7. 2. 박선숙 · 박지원 · 신용현 · 장병완 · 인재근 · 정동영 · 원혜영 · 유성엽 · 최경환(평) · 채이배 · 김영춘 · 이철희 의원 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김영춘 · 기동민 · 김민기 · 김병기 · 김종민 · 김철민 · 김한정 · 박완주 · 박정 · 서삼석 · 서영교 · 송갑석 · 신창현 · 안민석 · 여기구 · 위성곤 · 유동수 · 윤일규 · 윤준호 · 이규희 · 이상헌 · 이훈 · 임종성 · 전현희 · 정동영 · 조배숙 · 최인호 · 최재성 · 황주홍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

(2019. 7. 2. 김광수 · 정동영 · 장정숙 · 유성엽 · 이찬열 · 소병훈 · 천정배 · 조배숙 · 최경환(평) · 윤소하 의원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김광수 · 정동영 · 장정숙 · 유성엽 · 이찬열 · 소병훈 · 천정배 · 조배숙 · 최경환(평) · 윤소하 의원 발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 발의)

(2019. 7. 2. 김영춘 · 송갑석 · 박완주 · 전현희 · 신창현 · 정동영 · 김민기 · 조배숙 · 이규희 · 최인호 · 김종민 · 서영교 · 유동수 · 여기구 · 황주홍 · 이훈 · 김철민 · 윤준호 · 위성곤 · 윤일규 · 서삼석 · 김한정 · 최재성 · 김병기 · 박정 · 기동민 · 임종성 · 안민석 · 이상헌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이상헌 · 서형수 · 박재호 · 신동근 · 김정호 · 정세균 · 채이배 · 정춘숙 · 윤영일 · 도종환 · 손혜원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임재훈 · 주승용 · 이찬열 · 채이배 · 김동철 · 김수민 · 최도자 · 이동섭 · 장정숙 · 정인화 의원 발의)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

(2019. 7. 2. 백혜련 · 윤관석 · 김진표 · 김병기 · 신창현 · 임종성 · 김영진 · 박주민 · 위성곤 · 송기현 의원 발의)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 발의)

(2019. 7. 2. 조훈현 · 김석기 · 김기선 · 김성찬 · 문진국 · 이종명 · 김현아 · 송희경 · 이용득 · 강창일 · 원유철 · 최연혜 · 엄용수 · 김병욱 · 정우택 · 이종구 · 홍의락 · 윤재옥 · 김현권 · 김재경 · 김재원 · 박인숙 의원 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송기현 · 심기준 · 박재호 · 최인호 · 이상헌 · 도종환 · 윤호중 · 이석현 · 김민기 · 이용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

(2019. 7. 2. 김정우 · 송영길 · 기동민 · 김민기 · 정성호 · 강병원 · 김두관 · 윤후덕 · 윤준호 · 원혜영 · 조정식 · 이원욱 의원 발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김정우 · 김두관 · 김성수 · 김정호 · 박홍근 · 박정 · 신용현 · 원혜영 · 윤관석 · 임종성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2019. 7. 2. 주승용·강훈식·유의동·김관영·고용진·이찬열·장정숙·임재훈·최도자·김수민 의원 발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윤일규·신동근·서영교·김병기·이석현·기동민·안호영·윤호중·정춘숙·안민석 의원 발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주호영·김무성·강석호·이종구·김현아·김도읍·추경호·이진복·이종배·이채익 의원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주승용·장정숙·김삼화·유의동·김관영·이찬열·최도자·김수민·황주홍·위성곤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홍익표·소병훈·권미혁·송갑석·이재정·강창일·김민기·김병관·김부겸·김영호·김한정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홍익표·소병훈·권미혁·송갑석·이재정·강창일·김병관·김부겸·김영호·김한정 의원 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홍익표·소병훈·권미혁·송갑석·이재정·강창일·김민기·김병관·김부겸·김영호·김한정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홍익표·소병훈·권미혁·송갑석·이재정·강창일·김민기·김병관·김부겸·김영호·김한정 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홍익표·소병훈·권미혁·송갑석·이재정·강창일·김민기·김병관·김부겸·김영호·김한정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한정애·고용진·송영길·신창현·송갑석·박홍근·기동민·정세균·맹성규·

조용천·박경미 의원 발의)

이상 25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9. 7. 2. 이인영·나경원·오신환 의원 외 261인으로부터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자 7월 3일, 7월 4일, 7월 5일 본회의에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

○청원 제출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제1호 개정에 관한 청원

(2019. 6. 28. 전국식으로부터 최인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7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요구서 제출

‘북한 선박 삼척 입항 사건(2019.6.15.)’에 대한 청와대·통일부·국방부·국정원·해양경찰청 등 관련 정부 부처의 은폐·축소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2019. 7. 1. 나경원·오신환 의원 외 133인 요구)

○서면질문서 제출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관한 질문서

(2019. 7. 1. 김상훈 의원 제출)

○보고서 제출

2019년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보고서

(2019. 6. 28. 정부 제출)

6월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송부

2018년도 연합뉴스 경영평가보고서

(2019. 6. 28. 뉴스통신진흥회 제출)

6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송부